

2013. 6. 27

# 박근혜정부

## 복지정책 및 복지비용에 대한 평가

조경엽 · 유진성

# I. 서론

## ● 목차

- 서론
- 박근혜정부의 복지비용 추정
- 박근혜정부의 복지정책 평가
- 결론



- **대선공약 비용과 정부의 자원조달 계획**
  - 대선공약 이행의 소요비용
    - 여당발표 134.5조원 (복지관련재원 73.6조원)
  - 자원조달 계획
    - 예산절감 및 세출구조조정 71조원
    - 복지행정 개혁 10.6조원
    - 기타재정수입 5조원
    - 세수입 48조원
      - 비과세감면 축소 3조원
      - 지하경제 양성화 6조원
      - 금융관련 과세 강화 1조원

## ● 재원조달 계획 차질 가능성 고조

-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부족 발생
  - 2013년 예산 대비 12조원 이상의 세수부족
  - 세수입부족분 총당과 경기 활성화 17.3조원 편성
- 재원조달 계획 수정 불가피
  - 추경 편성 요구할 정도로 재정여력 약화
  - 복지담당 공무원 부족 호소
  - 세부담 증가 ⇒ 경기침체 심화

## ● 복지정책 재검토 및 완급조절 필요성 고조

- 현 정부 복지정책 추진 시 재정건전성 크게 악화
  - 2013년 예산:
    - ✓ 관리대상수지 -4.7조원, 국가채무 464.6조원, GDP 대비 34.3%
  - 추경 17.3조원 추가 시,
    - ✓ 국가채무 481.9조원, GDP 대비 35.6%
- 실질 국가채무 수준(발생주의 회계주의 추정, 기획재정부 2012 발표)
  - 총 1,255.4조원, GDP 대비 약 100%
    - ✓ 국가채무 774조원
    - ✓ 공기업부채 463.5조원
    - ✓ 지방정부 채무 17.9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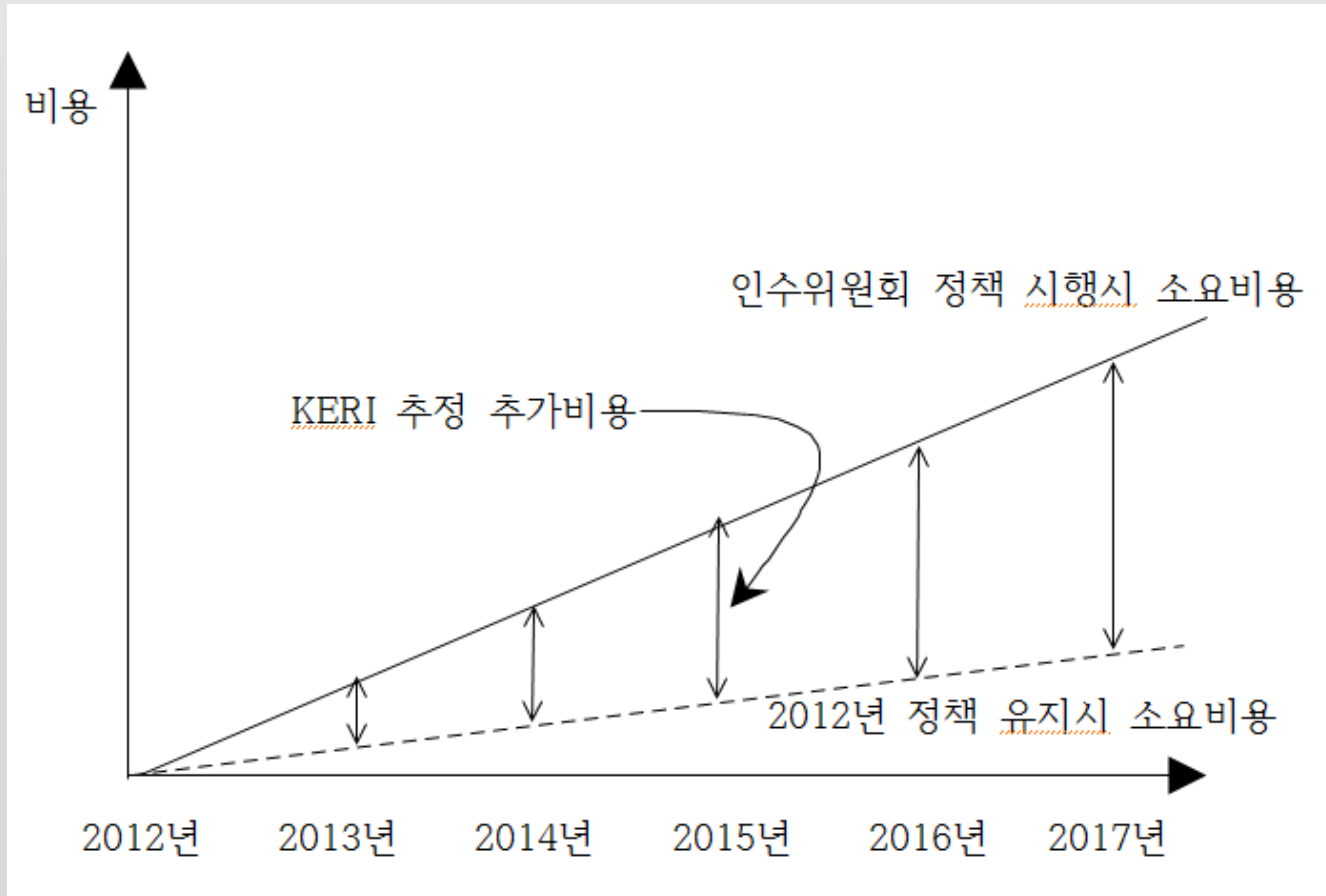
# I. 서론

## ● 연구목적

- 세부 항목별 소요비용 추정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발표기준
- 세부항목별 평가 & 우선순위 설정
  - 소득재분배 기능 측면
  - 고용 및 GDP 측면
- 정책제언

## II. 박근혜정부의 복지정책 비용 추정

### ● 추정방법



## II. 박근혜정부의 복지정책 비용 추정

### ● 추정방법

- 인수위원 발표자료의 내용 불분명, 다음 원칙 준수
  - 최소추정 원칙: 적용 가능한 가정 중 낮은 비용 산출 가정 선택
  - 시행 연도 불분명한 정책 : 2013 시행 2017년 완료
  - 내용 불분명한 정책 : 총선 혹은 대선 때 제시된 내용 적용
  - 통계 및 자료: 2012년 or 이용 가능한 최신 자료 사용
  - 미래의 자연 증가분: 통계청 전망 or 최근 3년 평균 적용
- 간접비용 분리 추정
  - 정부재정 이외의 부담(기금)
  - 민간부담(규제적 복지)
  - 부담주체 불분명



## II. 박근혜정부의 복지정책 비용 추정

### ● 추정방법

- 국정목표 2 – 맞춤형 고용·복지 국한하여 추정
  -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제공
  - 자립을 지원하는 복지체계 구축
  - 서민생활 및 고용안정지원
  - 저출산 극복과 여성 경제활동 확대
- 국가재정운용계획 분류 전환
  - 사회복지분야
    - ✓ 기초생활보장(3개), 취약계층지원(12개), 공적연금(1개), 보육·가정·여성(12개), 노인·청소년(2), 노동(7개), 주택(3개), 사회복지일반(9개)
  - 교육(5개)
  - 보건(6개)

## II. 박근혜정부의 복지정책 비용 추정

### ● 추정결과

단위: 억원	2013	2014	2015	2016	2017	평균	5년 합계
>총합계	175,714	186,378	232,341	260,931	273,365	225,746	1,128,729
[간접비용포함]	248,421	261,560	313,317	346,201	362,948	306,489	1,532,446

### ● 여당 발표보다 40조원 ~ 80조원 초과

- 113조원~153조원(간접비용 포함), 연평균 22.5조원~30.6조원(간접비용 포함)
- 여당발표 공약이행비용 134.5조원 - 복지관련 공약 비용 73.6조원
  - ✓ 총선에서 언급된 일부 내용 포함 시 83.6조원(예, 전국 초·중·고교생 토요일문화학교 체계적 지원, 보육교사 처우개선, 장애인 부가급여 인상, 의무수송헬기 도입 등)

## II. 박근혜정부의 복지정책 비용 추정

### ● 추정결과

<b>1.사회복지분야</b>	[간접비포함]	<b>1-1.기초생활보장</b>	[간접비포함]	<b>1-2.취약계층지원</b>	[간접비포함]	<b>1-3.공적연금</b>
1,000,422	1,404,140	5,669	6,027	85,360	114,543	164,142
<b>1-4.보육□가정□여성</b>	[간접비포함]	<b>1-5.노인□청소년</b>	<b>1-6.노동</b>	[간접비포함]	<b>1-7.주택</b>	[간접비포함]
165,894	184,893	33,791	12,487	28,065	252,670	548,470
<b>1-8.교육</b>	[간접비포함]	<b>1-9.사회복지일반</b>	[간접비포함]	<b>2.보건분야</b>	<b>2-1.보건의료</b>	<b>2-2.건강보험</b>
167,921	194,735	112,490	129,473	128,307	520	127,787

## II. 박근혜정부의 복지정책 비용 추정

### ● 추정결과

- 사회복지분야 100조원 ~ 140.4조원, 총 비용의 88% 차지
  - 주택 25.3~54.8조원, 보육가정여성 16.5~18.4조원, 공적연금 16.4조원
- 보건분야 12.8조원
  - 선택비용(진료비, 상급병실, 간병인) 비용 제외, 추가 보건수요 제외
- 교육 16.8~19.4조원

## II. 박근혜정부의 복지정책 비용 추정

### ● 추정결과

- 간접비용 40조원 (예제)
  - 주택분야의 간접비용 29.6조원
    - ✓ 행복주택, 공공임대, 공공분양 등 연 13만 가구 공급 예정, 국고지원을 제외한 부분이 간접비용
    - ✓ 행복주택건설(국민주택기금) 연평균 2.6조원
    - ✓ 공공주택(국민주택기금) 연평균 3.3조원
    - ✓ 주택연금사전가입제(주택금융공사) 연평균 400억원
  - 취약계층 지원(통신비, 양곡비, 전기세,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2.9조원)
  - 노동분야: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등 1.6조원
  - 반값등록금 중 대학자체 조달 비용(2.5조원) 및 대출이자율 제로화 등

# III. 박근혜정부의 복지정책 평가

## ● 분석모형

### ● 조경업 (2008) Model 활용

- Ramsey 성장모형 - 순수공공재 & 내생적 기술진보
- 재정지출분야
  - ✓ 순수공공재: 공공행정 및 국방
  - ✓ 비순수공공재: 교육, 연구개발, 보건, 사회복지, 환경위생, 문화오락, SOC, 주택건설
- 소비재화 6개로 세분화
  - ✓ 재정지출분야와 대체관계 반영
- 민간투자자와 정부투자자로 구분:
  - ✓ 정부지출의 성장기여 효과와 구축효과 반영
- 소득계층을 10분위로 분류
  - ✓ 재정지출의 수혜가 소득계층별로 차등배분 효과 반영
- 민간부문: 6개 산업
- 입력데이터: 2010년 산업연관표, 가계조사, 노동패널데이터

# III. 박근혜정부의 복지정책 평가

## ● 분석모형

	산업부문	소비재화	소득계층
공공부문	S01. 공공행정 및 국방	C01. 음식료	I. 0~10%
	S02. 교육	C02. 주거 및 광열료	II. 10~20%
	S03. 연구개발	C03 보건의료	III. 20~30%
	S04. 보건	C04. 교육·문화·오락	IV. 30~40%
	S05. 사회복지	C05. 교통 및 통신	V. 40~50%
	S06. 환경·위생	C06. 기타 소비재화	VI. 50~60%
	S07. 문화 및 오락		VII. 60~70%
	S08. SOC		VIII. 70~80%
	S09. 주택건설		IX. 80~90%
민간부문	S10. 농림수산업		X. 90~100%
	S11. 제조업		
	S12. 전력·가스·수도		
	S13. 수송 및 통신		
	S14. 금융 및 보험		
	S15. 기타 서비스업		

# III. 박근혜정부의 복지정책 평가

## ● 분석방법

### ● 재정지출의 소득계층별 귀착

- 행위접근법: Aaron and McGuire(1970)
  - 수요함수추정이 용이한 순수공공재에 적용
  - 계층별 수혜: 계층별 가처분소득에 한계효용의 소득탄력성 역의 지수승 한 값
  - 심상달(1988), 박기백 외(2004), 조경엽(2008)
  - 탄력성이 1보다 크면 순수공공재의 수혜가 누진적으로 배분
- 편익접근법: Meerman(1979), Selowsky(1979)
  - ✓ 재정지출 분야별 배분기준 수립 - 지니계수 변화 분석
  - ✓ 자의적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함
  - ✓ 심상달(1988), 박기백 외(2004), 성명재·박기백(2008, 2009), 조경엽(2008), 조경엽·유진성(2012)



# III. 박근혜정부의 복지정책 평가

## ● 분석방법

### ● 기준균형(조경업, 2008)

- 순수공공재
  - ✓ 박기백 외(2004) 추정된 탄력성 1.164를 이용하여 순수공공재 계층별로 배분
- 기타 재정지출의 소득계층별 귀착
  - ✓ 대부분 심상달(1988), 박기백 외(2004)의 배분 기준 채택
- Ramsey 성장모형에 반영, 기준균형 도출

### ● 정책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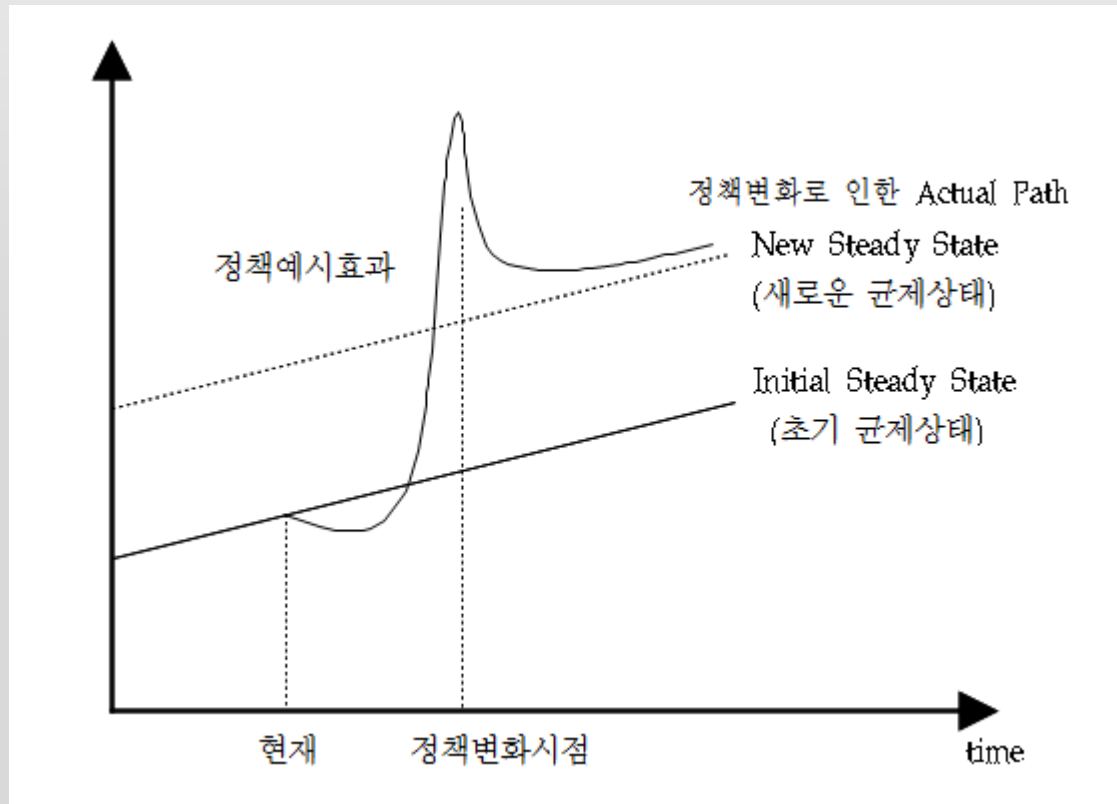
- 박근혜정부의 복지 정책별 배분기준 설정, 소득계층별로 배분
- Ramsey 성장모형에 반영, 새로운 균형 도출

### ● 정책분석

- 기준시나리오 하의 지니계수, 고용, GDP와 새로운 균형간의 차이 분석
- 재정지출의 직간접적인 효과를 모두 반영한 분석

# III. 박근혜정부의 복지정책 평가

## ● 분석방법



# III. 박근혜정부의 복지정책 평가

## ● 파급경로

### ● 소득재분배

- 직접효과: 소득계층별 귀착에 따른 소득변화
- 간접효과: 근로소득 & 자본소득 & 세금부담 변화
- 소득계층별 상대적 소득변화가 관건

### ● 고용 및 GDP 변화

- 소득계층별 소비 & 투자 변화 - 산업연관효과 - 생산 · 고용 · 투자 변화

# IV. 박근혜정부의 복지정책 평가

## ● 분석결과: 기초생활보장

- 추가소요 비용: 연평균 1,134억원~1,205억원
- 배분기준
  - 노동패널: 소득계층별 기초생활보장대상자 가구 비중

분위	W01	W02	W03	W04	W05	W06	W07	W08	W09	W10
비율	53	26	11.6	4.4	1.7	1.7	0	1.1	0.6	0

- 소득재분배 효과

		지니계수	10분위 배분을
가처분소득 (A)		0.315586	58.8
가처분소득+사회복지지출 (B)		0.313413	59.31
A+B+현 정부 정책 (C)		0.313028	59.4
변화율 (%)	B/A	-0.69	0.86
	C/A	-0.81	1.01
	C/B	-0.12	0.15
5000억원 단위당 변화 (%)		-0.10582	0.13228

# IV. 박근혜정부의 복지정책 평가

## ● 분석결과: 기초생활보장

- 고용 및 GDP 효과

	정책 종결 시 변화 (%)	5000억원 단위당 (%)
W01	-1.42	-1.2522
W02	-0.47	-0.4145
W03	-0.13	-0.1146
W04	-0.01	-0.0088
W05	0.03	0.0265
W06	0.03	0.0265
W07	0.05	0.0441
W08	0.04	0.0353
W09	0.04	0.0353
W10	0.04	0.0353
고용	-0.04	-0.0353
GDP	-0.07	-0.0617

# IV. 박근혜정부의 복지정책 평가

## ● 분석결과: 취약계층지원

- 추가소요 비용: 연평균 **1.7조원**(간접비 제외)~2.2조원(간접비포함)
- 배분기준
  - 노동패널: 소득계층별 정부지원금 비중

분위	W01	W02	W03	W04	W05	W06	W07	W08	W09	W10
비율	15.0	14.7	14.4	11.4	12.3	8.8	5.5	9.6	2.8	5.5

## ● 소득재분배 효과

		지니계수	10분위 배분율
가처분소득 (A)		0.315586	58.8
가처분소득+사회복지지출 (B)		0.313413	59.31
A+B+현 정부 정책 (C)		0.307044	60.81
변화율 (%)	B/A	-0.69	0.86
	C/A	-2.71	3.41
	C/B	-2.03	2.52
5000억원 단위당 변화 (%)		-0.11891	0.14761

# IV. 박근혜정부의 복지정책 평가

## ● 분석결과: 취약계층지원

### ● 고용 및 GDP 효과

	정책 종결 시 변화 (%)	5,000억원 단위당 (%)
W01	-21.27	-1.2459
W02	-10.04	-0.5881
W03	-4.18	-0.2448
W04	-1.84	-0.1078
W05	-1.72	-0.1007
W06	-0.75	-0.0439
W07	0.01	0.0006
W08	-0.59	-0.0346
W09	0.63	0.0369
W10	0.33	0.0193
고용	-1.58	-0.0925
GDP	-1.97	-0.1154

# IV. 박근혜정부의 복지정책 평가

## ● 분석결과: 기초연금

- 추가소요 비용: 연평균 3.3조원
- 배분기준
  - 노동패널: 소득계층별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

분위	W01	W02	W03	W04	W05	W06	W07	W08	W09	W10
비율	27.2	19.1	13.3	9.5	7.9	5.8	5.9	4.4	3.8	3.1

## ● 소득재분배 효과

		지니계수	10분위 배분율
가처분소득 (A)		0.315586	58.8
가처분소득+사회복지지출 (B)		0.313413	59.31
A+B+현 정부 정책 (C)		0.308303	60.53
변화율 (%)	B/A	-0.69	0.86
	C/A	-2.31	2.93
	C/B	-1.63	2.04
5,000억원 단위당 변화(%)		-0.04965	0.06214



# IV. 박근혜정부의 복지정책 평가

## ● 분석결과: 기초연금

### ● 고용 및 GDP 효과

	정책 종결 시 변화 (%)	5000억원 단위당 변화 (%)
W01	-20.18	-0.6147
W02	-9.62	-0.2930
W03	-4.68	-0.1426
W04	-2.36	-0.0719
W05	-1.49	-0.0454
W06	-0.65	-0.0198
W07	-0.53	-0.0161
W08	-0.05	-0.0015
W09	0.23	0.0070
W10	0.43	0.0131
고용	-1.59	-0.0484
GDP	-1.96	-0.0597

# IV. 박근혜정부의 복지정책 평가

## ● 분석결과: 여성·보육·가정 정책

- 추가소요 비용: 연평균 3.3조원
- 배분기준
  - 노동패널: 소득계층별 영유아 수 비중

분위	W01	W02	W03	W04	W05	W06	W07	W08	W09	W10
비율	1.8	4.7	11.7	13.6	16.1	10.9	11.5	13.0	8.2	8.4

## ● 소득재분배 효과

		지니계수	10분위 배분율
가처분소득 (A)		0.315586	58.8
가처분소득+사회복지지출 (B)		0.313413	59.31
A+B+현 정부 정책 (C)		0.311458	59.82
변화율 (%)	B/A	-0.69	0.86
	C/A	-1.31	1.73
	C/B	-0.62	0.86
5000억원 단위당 변화 (%)		-0.01869	0.02592

# IV. 박근혜정부의 복지정책 평가

## ● 분석결과: 여성·보육·가정 정책

### ● 고용 및 GDP 효과

	정책 종결 시 변화 (%)	5000억원 단위당 변화(%)
W01	-1.16	-0.0350
W02	-2.14	-0.0645
W03	-4.5	-0.1356
W04	-4.4	-0.1326
W05	-4.7	-0.1417
W06	-2.64	-0.0796
W07	-2.49	-0.0750
W08	-2.51	-0.0757
W09	-1.06	-0.0319
W10	-0.73	-0.0220
고용	-2.22	-0.0669
GDP	-2.18	-0.0657

# IV. 박근혜정부의 복지정책 평가

## ● 분석결과: 주택정책

- 추가소요 비용: 연평균 5.0조원

- 배분기준

- 노동패널: 소득계층별 25평 이하 전·월세 가구 비중

분위	W01	W02	W03	W04	W05	W06	W07	W08	W09	W10
비율	11.2	13.0	12.9	13.0	11.7	10.7	8.3	8.4	7.6	3.1

- 소득재분배 효과

		지니계수	10분위 배분을
가처분소득 (A)		0.315586	58.8
가처분소득+사회복지지출 (B)		0.304587	61.46
A+B+현 정부 정책 (C)		0.303666	61.68
변화율 (%)	B/A	-3.49	4.51
	C/A	-3.78	4.89
	C/B	-0.3	0.36
5000억원 단위당 변화 (%)		-0.00594	0.00712

# IV. 박근혜정부의 복지정책 평가

## ● 분석결과: 주택정책

- 고용 및 GDP 효과

	정책 종결 시 변화 (%)	5,000억원 단위당 변화 (%)
W01	3.65	0.07223
W02	3.58	0.07084
W03	4.21	0.08331
W04	4.20	0.08311
W05	4.27	0.08450
W06	4.12	0.08153
W07	3.91	0.07737
W08	3.76	0.07441
W09	3.68	0.07282
W10	2.77	0.05481
고용	3.63	0.07183
GDP	2.85	0.05640

# IV. 박근혜정부의 복지정책 평가

## ● 분석결과: 고교무상교육

- 추가소요 비용: 연평균 1.2조원
- 배분기준
  - 노동패널: 소득계층별 고등학생 수 비중

분위	W01	W02	W03	W04	W05	W06	W07	W08	W09	W10
비율	4.6	7.6	9.0	9.5	9.9	11.3	12.3	9.0	12.1	14.7

## ● 소득재분배 효과

		지니계수	10분위 배분율
가처분소득 (A)		0.315586	58.8
가처분소득+사회복지지출 (B)		0.309438	60.22
A+B+현 정부 정책 (C)		0.309382	60.24
변화율 (%)	B/A	-1.95	2.41
	C/A	-1.97	2.44
	C/B	-0.02	0.02
5000억원 단위당 변화 (%)		-0.00161	0.00161

# IV. 박근혜정부의 복지정책 평가

## ● 분석결과: 고교무상교육

- 고용 및 GDP 효과

	정책 종결 시 변화 (%)	5000억원 단위당 변화(%)
W01	-0.78	-0.06286
W02	-0.98	-0.07898
W03	-0.87	-0.07012
W04	-0.82	-0.06609
W05	-0.72	-0.05803
W06	-0.77	-0.06206
W07	-0.83	-0.06689
W08	-0.53	-0.04271
W09	-0.62	-0.04997
W10	-0.64	-0.05158
고용	-0.71	-0.05722
GDP	-0.94	-0.07576

# IV. 박근혜정부의 복지정책 평가

## ● 분석결과: 반값 등록금

- 추가소요 비용: 연평균 2.1조원
- 배분기준
  - 노동패널: 소득계층별 대학생 수 비중

분위	W01	W02	W03	W04	W05	W06	W07	W08	W09	W10
비율	3.6	6.5	8.8	11.0	11.1	11.8	12.4	11.5	12.4	11.0

## ● 소득재분배 효과

		지니계수	10분위 배분율
가처분소득 (A)		0.315586	58.8
가처분소득+사회복지지출 (B)		0.309438	60.22
A+B+현 정부 정책 (C)		0.309336	60.25
변화율 (%)	B/A	-1.95	2.41
	C/A	-1.98	2.45
	C/B	-0.03	0.04
5,000억원 단위당 변화 (%)		-0.00142	0.00189



# IV. 박근혜정부의 복지정책 평가

## ● 분석결과: 반값 등록금

- 고용 및 GDP 효과

	정책 종결 시 변화(%)	5000억원 단위당 (%)
W01	-1.05	-0.04958
W02	-1.5	-0.07083
W03	-1.57	-0.07414
W04	-1.74	-0.08217
W05	-1.52	-0.07178
W06	-1.49	-0.07036
W07	-1.52	-0.07178
W08	-1.26	-0.05950
W09	-1.17	-0.05525
W10	-0.9	-0.04250
고용	-1.28	-0.06045
GDP	-1.65	-0.07792

# IV. 박근혜정부의 복지정책 평가

## ● 분석결과: 4대 중증질환

- 추가소요 비용: 연평균 1.3조원

- 배분기준

- 노동패널: 소득계층별 '건강이 매우 안 좋다' 대답한 가구 비중

분위	W01	W02	W03	W04	W05	W06	W07	W08	W09	W10
비율	29.3	18.5	12.7	5.4	6.1	4.8	10.2	2.9	4.1	6.1

- 소득재분배 효과

		지니계수	10분위 배분율
가처분소득 (A)		0.315586	58.8
가처분소득+사회복지지출 (B)		0.298609	62.9
A+B+현 정부 정책 (C)		0.298505	62.92
변화율 (%)	B/A	-5.38	6.97
	C/A	-5.41	7.01
	C/B	-0.03	0.04
5,000억원 단위당 변화 (%)		-0.00223	0.00297

# IV. 박근혜정부의 복지정책 평가

## ● 분석결과: 4대 중증질환

### ● 고용 및 GDP 효과

	정책 종결 시 변화 (%)	5000억원 단위당 변화 (%)
W01	-6.81	-0.50636
W02	-3.01	-0.22381
W03	-1.42	-0.10558
W04	-0.25	-0.01859
W05	-0.2	-0.01487
W06	-0.04	-0.00297
W07	-0.73	-0.05428
W08	0.05	0.00372
W09	-0.02	-0.00149
W10	-0.21	-0.01561
고용	-0.59	-0.04387
GDP	-1.15	-0.08551

# IV. 박근혜정부의 복지정책 평가

## ● 분석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

- 추가소요 비용: 연평균 1.1조원
- 배분기준
  - 노동패널: 소득계층별 '건강이 매우 안 좋다' 대답한 가구 비중

분위	W01	W02	W03	W04	W05	W06	W07	W08	W09	W10
비율	36.8	20.5	13.7	4.3	5.1	5.1	7.7	0.9	4.3	1.7

## ● 소득재분배 효과

		지니계수	10분위 배분을
가처분소득 (A)		0.315586	58.8
가처분소득+사회복지지출 (B)		0.298609	62.9
A+B+현 정부 정책 (C)		0.298519	62.92
변화율 (%)	B/A	-5.38	6.97
	C/A	-5.41	7
	C/B	-0.03	0.03
5,000억원 단위당 변화		-0.00274	0.00274

# IV. 박근혜정부의 복지정책 평가

## ● 분석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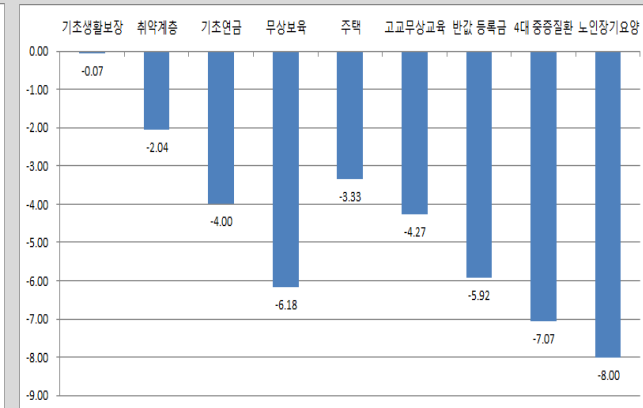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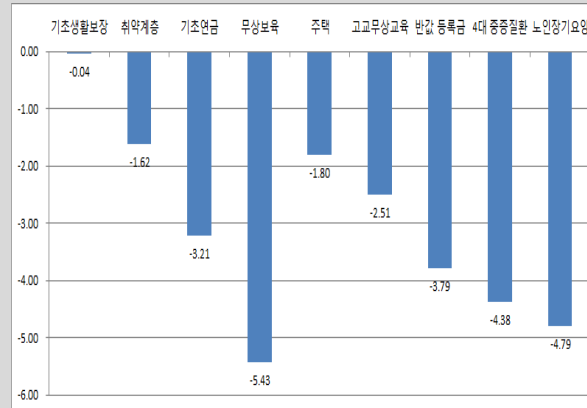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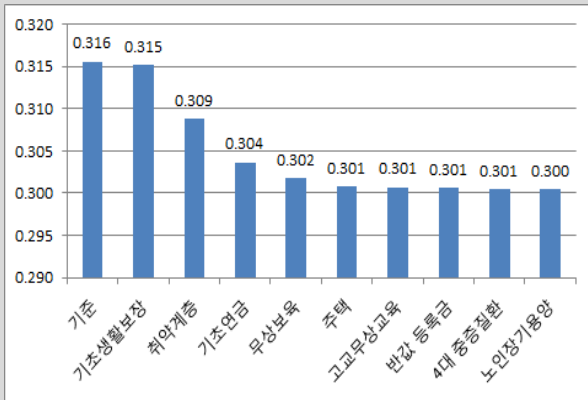
- 고용 및 GDP 효과

	정책 종결 시 변화	5,000억원 단위당
W01	-7.08	-0.64575
W02	-2.73	-0.24900
W03	-1.23	-0.11219
W04	-0.02	-0.00182
W05	-0.02	-0.00182
W06	-0.01	-0.00091
W07	-0.35	-0.03192
W08	0.23	0.02098
W09	0.01	0.00091
W10	0.06	0.00547
고용	-0.41	-0.03740
GDP	-0.93	-0.08482

# IV. 결론

## ● 하향 평준화

- 지니계수 5% 개선, 고용 4.8% 감소, GDP 8% 하락
- 합리적인 복지수준 모색
  - 과도한 복지지출
    - ✓ 복지투자-일자리 창출-창조경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정착의 장애요인
- 철저한 평가를 통한 우선순위 확립하고 복지규모와 완급조절 필요



# IV. 결론

## ● 정책우선순위

- 소득재분배: 취약계층,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순
- 고용과 성장효과:
  - 주택(+), 취약계층지원 감소효과 가장 큼
- 소득재분배 효과 크지 않으면서 고용 & 성장 둔화 효과 큰 정책
  - ✓ 반값 등록금, 고교무상교육, 4대 중증질환, 노인장기요양, 무상보육

소득재분배			고용증대			경제성장		
순위	정책	단위당 지니계수	순위	정책	단위당 고용	순위	정책	단위당 GDP
1	취약계층	-0.1189	1	주택	0.072	1	주택	0.056
2	기초생활보장	-0.1058	2	기초생활보장	-0.035	2	기초연금	-0.06
3	기초연금	-0.0497	3	노인장기요양	-0.037	3	기초생활보장	-0.062
4	무상보육	-0.0187	4	4대 중증질환	-0.044	4	무상보육	-0.066
5	주택	-0.0059	5	기초연금	-0.048	5	고교무상교육	-0.076
6	노인장기요양	-0.0027	6	고교무상교육	-0.057	6	반값 등록금	-0.078
7	4대 중증질환	-0.0022	7	반값 등록금	-0.06	7	노인장기요양	-0.085
8	고교무상교육	-0.0016	8	무상보육	-0.067	8	4대 중증질환	-0.086
9	반값 등록금	-0.0014	9	취약계층	-0.093	9	취약계층	-0.115

# IV. 결론

## ● 정책제언

- 전반적인 복지수준 축소 & 완급조절
- 성장과 고용 촉진
  - 주택정책 강화 – 기타 복지지출 축소
  - 특히, 반값 등록금, 고교무상교육, 4대 중증질환, 노인장기요양, 무상보육 재검토
- 소득재분배 강화
  - 취약계층,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추진
  - 저소득층 근로의욕 저하 & 탈수급유인 저하 방지 방안 모색

순위	정책	5000억원 단위당 1분위 고용
1	주택	0.072
2	무상보육	-0.035
3	반값 등록금	-0.050
4	고교무상교육	-0.063
5	4대 중증질환	-0.506
6	기초연금	-0.615
7	노인장기요양	-0.646
8	취약계층	-1.246
9	기초생활보장	-1.252





Thank You  
& Enjoy your stay!!!